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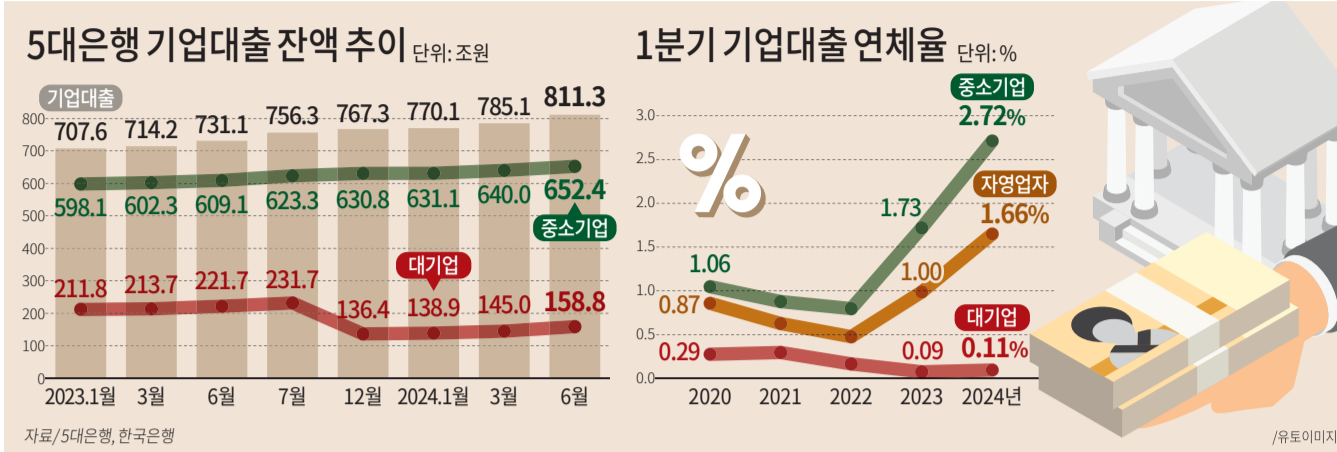
5대은행, 기업대출 44조... 연체율 상승에 건전성 '빨간불'

올해 상반기 기업대출 영업확대 영향
중소·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증가
하반기엔 우량기업 중심 대출 확대
수익성·건전성 확보 등 리스크 관리

올 상반기(1~6월)에만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은행의 기업대출이 44조원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24조원)와 비교하면 20조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문제는 증가하는 대출규모만큼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특히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811조3481억원으로 한달새 8조25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업대출 잔액(767조3139억원)과 비교하면 상반기에만 44조342억원 증가했다.

◆ 대기업 대출 상반기 16.5% 증가
기업대출 잔액이 증가한 이유는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들이 영업을 확대한 영향이 크다. 금융당국은 지



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서자 가계부채 규제를 강화했다. 은행이 가계대출을 통한 수익이 줄어들자 기업대출 규모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들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을 확대했다. 대기업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58조8821억원으로 한달전과 비교해 4조4155억원 늘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6.5% 증가한 수준이다.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보다 자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실우려가 상대적으로

로 낮다. 건전성 관리가 유리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을 포함한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652조4661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3.4% 증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요즘 회사채 시장이 회복돼 대기업들이 회사채를 주로 이용하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등급이 떨어진 BBB 등급의 기업들은 은행을 찾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대부분 경기회복이 더뎠다 채무상환 부담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우량중소기업이나 기존에 거래가 이어진 곳들

을 제외하고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 부실확대에 "우량기업만 대출" 실제로 기업대출의 연체율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 규모별 기업대출 연체율은 대기업의 경우 2020년 1분기 0.29%에서 2021년 1분기 0.31%→2022년 1분기 0.18%→2023년 1분기 0.09%→2024년 1분기 0.11%로 하락하는 추세다. 반면 중소기업 연체율은 2020년 1분

기 1.06%→2021년 1분기 0.89%→2022년 1분기 0.81%→2023년 1분기 1.73%→2024년 1분기 2.72%로 상승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좋아졌지만, 반도체·운수 등 일부 업종과 대기업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과 영업이익률이 여전히 부진하고 업황이 아직 본격적으로 개선되지 않아 연체율이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개인사업자의 연체율도 급격히 오르고 있다.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2020년 1분기 0.87%→2021년 1분기 0.64%→2022년 1분기 0.49%→2023년 1분기 1%→2024년 1분기 1.66%로 집계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출을 중심으로 취약기업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연체율은 더 오르고 있다"며 "상반기에는 수익을 내기 위해 보다 낮은 금리 경쟁으로 기업대출을 확대했다면, 하반기에는 수익성과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우리 기자 yull15@metroseoul.co.kr

조희연 "4·5지 선다형 평가, 논서술형으로 바꿔야"

서울시교육감 10주년 기자회견
"대입제도·대학서열화 개혁 앞장
평가 방식의 근본적 전환 필요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현수능을 논서술형 평가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33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공론화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2일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등교육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대입제도, 대학서열화 체제 개혁을 위해 앞장서겠다"라며 "현재의 4지·5지 선다형 평가 방식을 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서울교육 10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서술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조 교육감의 취임 10주년을 맞아 마련됐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4년 20대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된 뒤 2018년, 2022년 연임에 성공하며 서울교육감으로서 '최장기 임기' 기록을 세우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10여년 전 처음 교육감으로 당선되며 학생을 성적으로 줄세우는 교육을 개혁하고, 교육 불평등에 도전하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약속했다며 교육 혁신을 위해 추진할 과제 중 하나로 대입제도 개편을 꼽았다. 그는 "인공지능 시대가 요구하는 창

의력을 기르기 위해 평가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라며 "2033 대입제도"를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8 대입개편안'이 교육부와 국교위에서 논의되던 당시에도 논서술형 평가 체제가 제안됐지만, 당시에는 '시기상조론'이 지배적이었다. 조 교육감은 "혁신학교, 서울형 미래학교, 디지털 선도학교, IB관심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학교에서 교실혁명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수업·평가의 혁신은 지속돼야 하고, 수업이 바뀌려면 평가 방식의 근본

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소외된 교육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맞춤형 지원을 하는 '정의로운 차등' 정책도 더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가장 소외된 교육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지난 10년 성과를 기반으로 한층 더 강화하겠다"라며 "올해는 그 핵심 정책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추진해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우리 학생들이 필요에 맞는 맞춤형 통합적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0년 간의 서울 교육 혁신에 대해 ▲학생 중심 교육과정 다양화 등 '교실혁명 프로젝트' ▲무상급식 확대, 특수학교 신설 등 교육 불평등 극복 등으로 구분해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ihj@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경상북도 경주시

2025 APEC 정상회의의 주

가장 한국적인 도시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기억할 경주가 됩니다.

역대 가장 완벽한 APEC
경상북도 경주시와 함께합니다.